

# 차기 정부과제, '일자리' 1위... 40·70대는 '정치개혁' 1위

[시장경제신문 창간 10주년 여론조사]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할 최우선 정책 순위는?  
PNR 의뢰, 18~19일 휴대전화 RDD 방식 실시  
일자리20.3%, 정치개혁20%, 부동산16.7% 순  
일자리, 부산·울산·경남 지역, 20대 가장 높아  
50·60대도 차기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선택  
일자리와 함께 정치개혁·부동산 정책도 상위권

차기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일자리 창출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부문이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여야 모두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데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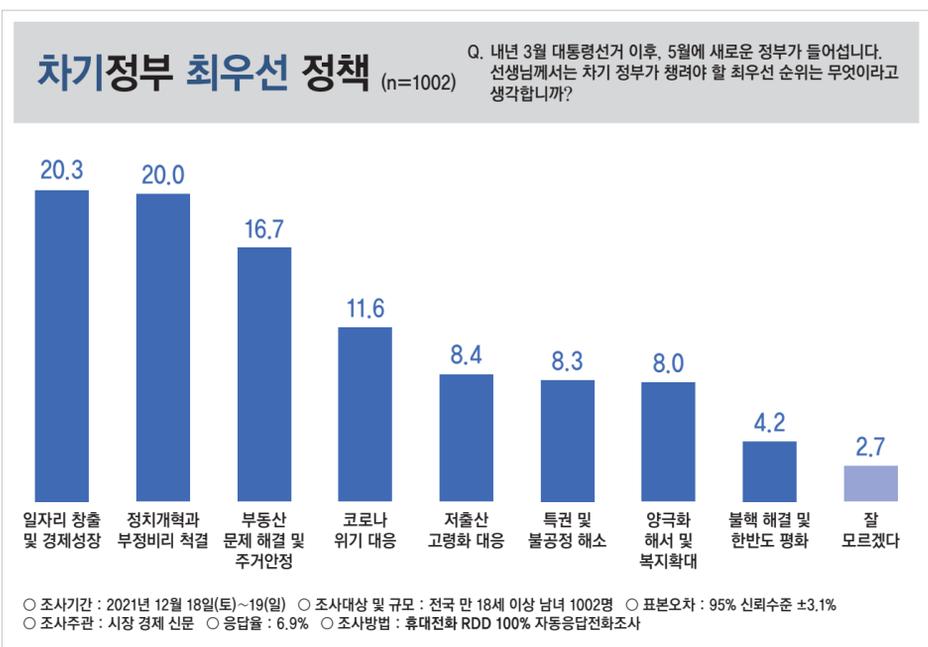
20일 시장경제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 리서치(PNR)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할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20% 이상이 각각 오차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20.3%)과 정치개혁과 부정비리 척결(20.2%)을 꼽았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주거안

정(16.7%), 코로나 위기 대응(11.6%) 순이었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 대응(8.4%), 특권 및 불공정 해소(8.3%),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대(8.0%), 복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4.2%)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울산·경남(28.2%), 경기·인천(20.5%)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7.6%)보다 국민의힘 지지층(24.6%)에서 일자리 창출 여론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대(25.9%) 뿐만 아니라 오차 범위 안에서 50대(23.6%)와 60대(21.2%)도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 변화를 선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도입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극심한 취업난을 온몸으로 겪은 20대와 5060세대의 불만이 여론조사 결과



사진=시장경제DB

로 드러난 셈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40대(23.8%)와 경제활동을 접은 70세 이상(24.6%)은 일자리 정책보다 정치개혁과 부정비리 척결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개혁과 부정비리 척

결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할 정책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27.0%) 지역에서 일자리 정책 및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이어 대전·세종·

충남북(22.4%), 대구·경북(21.2%), 광주·전남북(18.8%)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19.6%)보다 더불어민주당(22.9%)에서 정치개혁과 부정비리 척결 여론이 더 높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주거 안정'의

경우 지역별로 확연한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서울(22.4%), 경기·인천(18.6%)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주거 안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반면 강원·제주는 6.0%에 그쳤다. 수도권 주택 가격과 전세값 폭등으로 유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무주택자에게는 전·월세 부담이 커진 현실이 설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22.1%)가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지지정당 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지지자 23.7%와 정의당 지지자 19.6%, 국민의힘 지지자 18.4%는 부동산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열린민주당은 4.8%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시장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8일~19일 이틀간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며 응답률은 6.9%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media #Strategy #AI #creativity #SDGs #global #Entertainment #SpikesAsia #brand #CannesLions #Creative Data

## 크리에이티비티 & 마케팅 뉴스

# 브랜드브리프

www.brandbrief.co.kr

## 피해 파악 없이 100만원씩 균등 지원 소상공인 “선심성 푼돈”

### 총 4조3,000억원 투입... 文 사과 하루 뒤 발표 연말 대목 놓쳤는데 겨우 100만원? 소상공인 반발

정부가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여행·공연업 등이 포함된 230만 곳이 추가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매출 감소 기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 공개없이 진행돼 졸속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지원금을 비롯해 방역 지원 물품 현물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포함한 3종 패키지를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지원금은 여행·공연업처럼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상적 영업을 불가능했던 업종들이 추가됐다. 또 기존 업종을 규제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나누고, 매출 손실 규모 등을 구

간별로 복잡하게 적용했던 것과 달리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전 손실보상 대상 (유흥 시설, 카페, 음식점 등) 90만 명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 명을 더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간막이 등 10만원 상당의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일괄지원과 별도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됐다. 미용실,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등 인원 제한 업종들도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시장경제DB

만 내용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상금 지급 시기도 유흥 시설, 식당 등 영업제한 업종은 연말까지 100만 원을 일괄 지급 받지만 여행, 공연 시설 등 일반 업종은 내년 1월 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졸속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미 방역지침 강화로 연말 대목을 놓쳐 손실액이 상당한데 100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은 '선심성 푼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 6곳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거리두기 강화에 항의하는 '100만명 집단 휴업 강령 조치'도 발일 예정이다. 이준영 기자 lij@meconomynews.com

## 중견기업 519개↑, 총매출 770조... 미래車 투자 최다

### 산업부-통계청,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중기 643개... 진입7개 기업집단 대기업 편입

국내 중견기업수가 지난해 500개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은 14일 중견기업의 현황 파악과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519개(전년대비) 늘어난 5526개로 전체기업의 1.4%를 차지했다. 7개 기업집단(107개사)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간 반면 중소기업중 643개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중견기업 매출액은 770조 원으로 비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증가했으나 제조업에서 중견기업의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

며 전년대비 11조5000억원 줄어 들었다. 이는 전체 기업 매출의 16.1% 수준이다. 규모별로는 1조원 이상 기업이 107개(1.9%),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기업이 4934개(89.4%)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는 15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조업에서는 소폭 감소했으나 건설 7만3000명, 운수(물류 등) 2만4000명, 도소매 1만5000명 등 비제조업에서 증가하며 전년보다 9만2000명 늘었다.

중견기업 5개중 1개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제조중견기업의 40.2%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미래차가 28.3%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중견기업 기본통계 주요결과. 사진=신자부

헬스(13.7%), 친환경(12.0%), 에너지(11.9%)가 뒤를 이었다. 총 투자실적은 26조6734억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했으나 전체투자중 R&D투자 비중은 28.9%로 전년대비 1.6%p 증가했다.

이밖에 중견기업의 58.5%가 ESG경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미 도입한 중견기업도 19.7%(제조업 2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